

# “고창 바닷속 환경 생태조사하자”

### 성경찬 도의원, 도정질문서 “지역발전·도민행복 증진 나서야” 촉구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성경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고창)이 10일 제382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지역발전과 도민행복 증진을 위해 전북도가 행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성경찬 의원은 먼저, 고창 바닷속 환경 생태조사에 전북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과거 한빛원전에서 방류된 윤배수로 인해 몇 차례 바지락 집단 폐사를 겪었던 고창군민들이 새만금 방조제와 신항만 건설 이후에는 모

래 구름지 생성, 밀물과 썰물의 유속 변화로 인한 침전물 생성 등 급격한 바다 환경변화로 고창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련 발인은 물론 수시로 전북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으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두 번째로, 도내 유네스코 지정 유산의 관리·보존·활용에 보다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유네스코 지정 유산 등재는 해당 유산이 특정 국가 또는 민족의 유산을 떠나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유산이라는 뜻이다”며 “국제적인 지명도가 높아지면서 관광객 증가와 이에 따른

고용기회, 수입 증가 등 지역 발전과도 연결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지만, 도내 3곳의 세계유산과 3개의 무형유산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북도는 단순 예산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유네스코 유산의 보전·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 역시 타 시도의 조례에 비해 느슨하다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인 고창 갯벌과 관련해 도민의 염원과 오랜 기간의 준비와 노력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성 의원은 마지막으로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기차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순식

간에 1,000도 넘게 온도가 치솟는 열폭주가 발생하는데 도내 13개 소방서 중 화재 진화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장비인 질식 소화도를 갖추고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으며, 기타 진화 장비 역시 충분하지 않아 효율적인 진압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전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성경찬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도민이 힘겹게 일상을 버티는 가운데, 인구 180만 명이 무너지고, 각종 경제지표들이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 자주 들려온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전북도가 미래를 위한 준비와 노력을 철저히 하고, 행동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전주시의회 정례회 5분 발언

### “동산역, 혁신도시 대안역으로”

#### 송영진 시의원, “국제금융도시 지정 위한 구체적 방법 ‘전주·익산 도심, 혁신도시 교통망 확대 등도 필요’”



전주의 제3 금융 중심지 도약을 위한 혁신도시 대안역(驛舍) 지정과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주와 익산 도심지와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 확대·구축, 전주만국제금융도시 지정을 위한 기반이던 주장도 나왔다.

전주시의회 송영진(더불어민주당, 혁신·덕진·팔복·조촌·여의동) 의원은 10일 열린 제38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주 동산역을 혁신도시 대안역으로 지정·활용하는 것은 국제금융도시 지정을 위한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의 대안역 활용 논리는 현재 여객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전주역이나 익산역에서 혁신도시까지 이동 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또 동산역이 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에서 비교적 가까운 4.5km 거리에 있고, 2024년에는 역 건너에

전주탄소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 활용 가치가 높다는 점도 동산역 활용의 이유다.

그는 “동산역은 2009년까지 여객수송 열차가 다녔고 지금은 전북 최대 화물역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새 역사를 짓는 대신 동산역을 대안역으로 활용하면 혁신도시 교통문제 해소와 탄소산단 유동인구 확보, 전주 북부권 도시 재생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3금융도시 유치에 전주와 익산 도심에서 혁신도시까지 이어지는 교통망을 확대·구축하는 방안도 내놨다. 송 의원은 “혼잡 시간 만이라도 각 역과 혁신도시를 오가는 직행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황방산 터널 개통 등 교통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전 금융기관을 위한 전주만의 혁신적인 지원책 구성? 시행 방안도 제시했다. 당장 금융 전용 건물 임주가 불가능한 상황을 감안, 민성동 법조타운 공실 사무공간을 활용하는 기관의 임대료 지원 같은 것들이다. 그는 “현실을 냉철히 분석해 혁신적인 대안으로 제3금융도시 전주 유치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 “전화 한 통만 했어도

### 소명될 일로 오명 씌워”

#### 김수홍 의원, 권익위 조사결과 정면 반박



김수홍 의원(익산·기화정 의원회)이 10일 국회 소풍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게 제기된 농자법 위반 의혹은 명백한 오류이며, 부동산 투

기 의혹과도 전혀 관련 없다”며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의원은 “연료하진 부모님께서 살아생전 토지를 증여하시겠다는 뜻을 받들어 증여를 받게 된 것”이라며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투기 의혹을 밝혀낼 목적의 조사인데 투기와 관련성 없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의혹을 덧씌운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김 의원은 “나는 농지를 구매하지도 않았고 관 적도 없으므로 조사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농지법 제2조 제1항 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했고, 계약자로 가족인 동생을 지정해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관련자료를 즉시 제공해 깨끗하게 소명할 것”이라며 “아버지의 헌신에 도리를 다하지 못한 점 깊이 사죄드리고 국민들께도 심려 끼쳐드려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민주 윤준병 의원, 기간제

### 파견근로자 보호 강화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은 지난 9일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용 범위 및 차별적 처우의 금지 등을 4인 이하 모든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파견근로자 보호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상시 4인 이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법의 취지를 구현하면서도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을 감안하도록 하는 보완조치도 규정했다. /유호상 기자



민주인권기념관 착공식

제34주년 6·10 민주헌정 기념식이 열린 10일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에서 옛 남영동 대공분실 자리에 새로 세워지는 민주인권기념관 착공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 “진안의료원 독립화해야”

#### 이한기 도의원, 도정질문서

전북도의회 농산임업경제위원회 이한기 의원(진안 더불어민주당)이 10일 382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진안의료원의 독립화와 예산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며 전북도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진안 무주 장수 동부신약권 지역을 통틀어 상급종합병원과 일반종합병원은 단 한 곳도 없고, 병원급으로 진안의료원이 유일하다. 이 밖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도 전무하며, 도내 14개 시·군 중 무진장 세 곳만 요양병원이 없을 정도로 도내 동부신약권이 의료취약지 중 취약지로 전락해 있다.



이 의원은 “산부인과 분만실 한 곳이 없어 출산이 임박해 불안에 떨고, 한밤중에 응급사실을 당해도 갈 곳이 없다”며 그곳에 사망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공공병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도지사 공약사업에서 동부권 소외현상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동부권 발전을 위해 전북개발공사를 비롯한 도출자·출연기관의 동부권 이전을 제안하기도 했다. /유호상 기자

## “노인 1식 단가 2500원, 아동 6000원”

#### 진형석 도의원, “노인무료경로식당 급식단가 현실화해야”

전북도 취약계층의 결식을 막기 위한 무료급식 지원사업이 지원대상에 따라 급식단가가 상이해 세대별 차별지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과 노인 급식단가가 2.4배에 달하는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노인급식 단가 현실화를 주장했다.

진 의원은 “노인무료경로식당 1식 단가 실제 순수 식재료비 구입을 위한 단가는 2500원,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급식의 1식 단가는 6000원으로 무려 2.4배 이상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결식을 막기 위해



밤 한끼 제공하는 동일한 사업 목적임에도 대상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형평성과 적정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질문에 대해 최훈 행정부사는 “노인무료급식사업에 대한 단가 상향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라며 “전북도는 노인무료급식의 질을 높이고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유호상 기자

## “선출직 공직자라면

### 부동산 투기 의혹 없어야”

#### 민주 한병도 의원, 농지법 협의 받는 현직 도의원에 탈당 권유



더불어민주당 익산 지역위원장 한병도 국회의원은 10일 부동산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소속 지역구 현직 도의원에 탈당을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산 거래와 보유 과정에서 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에게 탈당을 권유한 바 있다.

이에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익산 지역위원회 소속 지방의원을 중 투기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원에 대해 중앙당과 맞 맞추어 탈당할 것을 권유하고, 집권당의원의 신분을 벗고 무소속의원으로 의혹 해소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한 의원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선출직 공직자라면, 부동산투기에 한점의 의혹도 없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소속지역구 지역위원회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일체의 법 위반 의혹이 없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해 볼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더불어민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내로남불 논란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 “전주·완주 택시사업구역 통합 서둘러야”

#### 박선전 시의원 “택시기사 분쟁 해소 등 위해”



사실상 동일 생활권임에도 사업구역이 분리돼 각종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전주·완주 택시사업구역 통합에 대한 필요성이 의회에서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박선전(더불어민주당, 진북·인후1·2동·금암1·2동) 의원은 10일 열린 제38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의 불편과 혼란, 택시기사 사이에 빚어지는 각종 갈등 등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사업구역 통합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2013년 혁신도시 일원 약 990만㎡를 전주·완주 택시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전주지역은 민성동과 중동 상림동 완주지역은 이서면 일부가 이 구역에 들어가 동일 요금을 적용했다. 당시 공동사업구역 지정은 전주와 완주로 나뉜 혁신도시에서 요금과 운행구역을 둘러싸고 혼란과 불만, 갈등이 빚어지던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혁신도시를 둘러싼 생활권이 계속 넓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8년 전 혁신도시 내 전주와 완주 경계선은 지금에 와서는 혁신도시와 완주군 기존 이서면으로

옮겨 간 한국이다. 택시사업구역을 새롭게 조정해야 한다는 1차적인 여론이 나오는 이유다.

또다른 사업구역 조정 필요성도 있다. 전주와 완주는 지리적으로 동일 생활권이고, 양 시·군을 이동하는 주민도 하루 30만 명에 이르고 있다. 버스의 경우 전주 시내 버스가 완주 여러 곳을 종점으로 운행 중이다. 하지만 택시는 혁신도시를 뺀 대부분의 사업구역이 다르다. 양 시·군 주민의 불편은 물론이고, 택시 기사 사이에서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되고 있는 부분이다.

완주의 한 회사는 택시 4대의 1가량의 사업구역을 전주와 완주에 모두 두고 전주에서 주로 영업을 하는 등 비합리적인 운행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택시사업구역 조정·통합은 동일 요금 적용으로 혼란을 줄이고 양 시·군 통행 주민에게 농촌지역 환경을 조정에 따른 요금 인하, 택시 영업범위 확대에 따른 이용 증가 등 어느 한쪽에 유리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완주 인구 85% 정도가 전주 경계에서 택시로 10분 정도 떨어진 데 따른 거주하고, 완주 군민이 전주의 여러 인프라를 활용하는 점 등을 감안해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택시 사업구역 조정에 전주시와 완주군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의회 복환위, 덕진보건소 원활한 운영 선제 점검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0일 우이동 소재 덕진보건소를 찾아 현장 점검을 나섰다. 이날 점검은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및 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건립된 덕진보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루어졌다.



특히 서안이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차질없는 덕진보건소 내 설치된 코로나19 덕진집중보건센터를 방문해 센터 운영 및 6월 집중계획에 대해 청취한 뒤, 차질없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서 위원장은 “신속한 코로나 19 예방

접종이냐말로 시민들에게 잃어버린 일상의 자유를 찾아줄 유일한 방법”이라며 “힘들겠지만 여러분의 사명감과 용기가 코로나 정황기에 전주의 밀려들음을 명심하고 조금만 더 힘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